

# 광주·전남도 교복 담합 의혹...철저한 전수조사 촉구

### 학교 대부분 투찰률 90% 이상...다수 학교서 투찰률 상한가 근접 지적 1·2순위 투찰액 차이도 1천~2천원 불과...시민단체, 경쟁 미작동 주장 2023년 담합과 유사...업체명·주소 변경 낙찰 정황 등 제재 필요 목소리

광주·전남 지역 일선 학교의 교복 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의심되는 정황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최대 60여만원에 달하는 교복 가격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교복 입찰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와 함께 교복 제도의 타당성과 운영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조달청 국가중립전자조달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광주 지역 중·고등학교 교복 입찰 결과, 낙찰자의 투찰률(낙찰하한율)이 90% 이상인 학교는 12곳(사립학교 10곳)에 달했다.

전남 지역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진행된 중·고등학교 교복 입찰 결과, 38개 학교 가운데 투찰률이 95% 미만인 학교는 5곳에 불과했다. 90% 미만은 담양군(79.772%)과 고흥군(88.588%) 등 2곳뿐이었으며, 9개 학교는 투찰률이 99%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광주시민사회에서는 업체들 간 가격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상한가 이하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낙찰되는 구조임에도, 다수 학교에서 낙찰 금액이 상한가에 매우 근접한 수준으로 형성됐기 때문이다.

광주·전남 지역의 각 학교 입찰에는 대부분 2-3개 업체에서 많게는 5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일부 학교 입찰에서는 1·2순위 투찰 금액 차이가 겨우 수백원대에 머물고, 대부분 1000~2000원 내외의 차이를 보이는 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에서는 업체들이 사전에 가격을 담합해 상한가에 근접하게 투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 2023년에도 광주 지역 136개 중·고등학교가 발주한 교복 구매 사업에서 이와 유사한 방

식의 조직적 담합이 적발돼 27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됐고, 광주지방법원은 교복업자 29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마무리됐으며, 다음달 중의 안 상정이 예정돼 있다.

특히 올해 광주 지역 A중학교와 B고등학교의 입찰 과정에서는 특정 업체가 업체명과 주소·대표자명을 변경하며 운영해 5년 연속 97~98%대 투찰률로 낙찰을 받은 정황도 파악되는 등 새 학기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등굣길을 휘게하는 교복 업체들의 '깜짝미'가 여전히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이날 "교육청은 교복 입찰 과정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담합이 확인될 경우, 형사 고발 및 입찰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복 가격 부담이 날로 심화되는 가운데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교복 대신 체육복이나 생활복을 착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교복 제도의 실효성과 복잡 자율화 등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차원에서 전국 학교의 입찰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업체 간 담합 징후가 적발될 경우 형사 고발 등 부정당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에서 진행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게 온당하지, 만약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올해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교복협의회가 설정한 광주·전남지역 교복 상한가(동·하복)는 34만4530원 수준이다.

/윤준명 기자 yoon@kwangju.co.kr



새학기 앞두고 식품 점검 신학기 개학을 앞둔 23일 오전 광주시 북구 신안동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한 상점에서 구청 위생과 직원들이 고열량 식품과 정서저해식품 판매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 학대 피해 의심 자폐아이 녹음기 지참 등교시켰다면...교권침해?

### 교사 5명 "심리적 불안" 주장 무안교육청 오늘 교권보호위 학부모 출석 요구...관심 집중

무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불거진 중증 자폐아동 학대 의혹(광주일보 12월 11일 6면 등)과 관련해, 피해 의심 아동의 보호자가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교권보호위원회 출석을 요구받았다.

무안교육지원청은 24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열고 자폐아동 A(13)군 보호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무안지원청은 A군 부모가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자녀에게 녹음기를 착용시켜 교실 수업 및 학교생활을 녹음하게 한 행위와

관련, 교사 5명이 교권 침해를 주장해 교보위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사들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인 음성이 무단으로 기록·저장돼 교육활동 및 사생활 침해로 인한 심리적·정신적 부담과 불안을 느꼈다"며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A군 부모는 자녀의 장애 특성상 의사소통이 제한된 상황에서, 학교 측으로부터 학대 피해를 받고 있다는 의심을 받던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녹음기를 이용해야 했다고 항변하고 있다. 녹음기가 아니면 자녀가 받는 피해 상황과 안전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다.

A군 부모는 지난해 12월 16일 동일 사안으로 한 차례 교보위에 출석해 의견을 밝혔으나, 무안 지원청은 사안이 복잡하다고 판단돼 결정이 미루

것으로 나타났다.

무안지원청 담당자는 "지난해 12월 첫 교보위에서는 해당 사안이 단순한 교육활동 침해로 보기 어렵고 아동학대 신고와도 연관돼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결정을 미뤘다"며 "오는 3월 A군의 중학교 진학 시기와 맞물려 더 이상 사안을 보류할 수 없다는 판단에 위원회 회의가 재소집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4일 검찰은 A군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로 송치된 40대 교사 B씨에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B씨는 학교에서 A군에게 '야 이 X친새X야', '일어나 이 새X야' 등 욕설과 고성을 퍼붓는 등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측은 지난 12일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 검찰개혁법 앞두고...광주지검장 "보완수사권 남겨야"

검찰이 공소장에 보완 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광주지검은 23일 김중우 광주지검장 주재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차 보완수사권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회가 다음 달 초 검찰 개혁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지키기 위한 '막판 호소전'에 나선 모양새다.

김지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보완수사는 검찰이 지키려는 권한이 아니라 억울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 안전망"이라고 했다.

이어 "구속 사건,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은 보완 수사 없이는 대응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수사기

소 분리는 확증편향 통제가 목적인 만큼 검사 수사 개시 폐지만으로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검장은 공소청이 보완수사 요구권만 갖는 안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나, 반복된 보완 요구로 사건만 지연되면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찰개혁 정부 재입법 예고안에 대해 공소청에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하는 방향으로 당론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사법 개혁 3법은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모두 처리할 방침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전남대병원, 176억대 통상임금 소송 패소

전남대병원이 176억여원대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정영호)는 전남대병원 직원 1905명이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원들에게 미지급 수당 중 176억 3824만여원을 지급할 것을 전남대병원에게 주문했다.

전남대병원 직원들은 병원 측이 지난 2015년부터 통상임금을 산정하면서 정기상여금·명절휴가

비·간조사 야간간호료 등을 제외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당을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남대병원 측은 간호사 야간간호료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또 직원들의 실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7시간 30분을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해야 하며, 주당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이내의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직원들의 손을 들어 줬다. 명절휴가의 경우 단체 협약에 따라 일정한 시기에 지속 지

급돼 정기성과 일률성을 갖췄으며, 야간간호료도 매달 야간근무 횟수에 비례해 정기 지급됐던 만큼 통상임금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야간간호료 등을 복지부 의료수가 등을 통해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근로 대가로서의 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판단도 내렸다.

전남대병원은 병원 노조가 제기한 67억원대 임금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전남대병원 노조 소속 직원 1091명이 병원 측에 제기한 67억여원대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72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6]

www.kwangshin.ac.kr

학부 신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유아교육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음악학부  
대학원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입학문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For the Lord  
주님을 위하여

To the World  
세상을 향하여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